

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5가단245786 손해배상(기)
원 고 홍○○
인천 부평구 굴포로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응석
피 고 주식회사 ○○식품
인천 서구 대곡로
대표이사 박○○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박형일
변 론 종 결 2016. 6. 28.
판 결 선 고 2016. 7. 12.

주 문

1. 피고는 박○○와 공동하여 원고에게,
가. 62,905,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6. 3.까지는 연 5%의, 그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
나. 7,842,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12. 18.까지는 연 5%의, 그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0,747,593원 및 그 중 62,905,516원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6. 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, 나머지 7,842,077원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12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박○○는 인천 서구 ○○○동 ○○○-○ 소재 공장에서 '○○식품'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(이하 '이 사건 공장'이라 한다)을 운영하였던 자이고, 원고는 운송업을 하던 자로서 박○○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.

나. 원고는 2012. 1. 26. 13:00경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덤웨이터(작업용 엘리베이터)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수행하던 중 덤웨이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13. 1. 15. 박○○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합3030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4. 6. 3. '피고(박○○)는 원고에게 62,905,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6. 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관련 1심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

라. 원고와 박○○는 이 사건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, 서울고등법원은 2014. 12. 18. "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(박○○)는 원고에게 7,842,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12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"는 내용의 판결(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4나2020903 판결)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5. 1. 6.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확정판결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. 8. 28. 이 법원 2014타채26793 호로 박○○를 채무자, 검단농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, 청구채권액을 73,271,999원,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, 이 법원은 2014. 9. 1.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단, 압류금지채권 부분 제외)을 하였으며,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박○○ 등에게 도달하였다.

마. 피고는 2014. 9. 15.에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박○○이고, 본점소재지는 인천 서구 ○○로 ○○번길 ○○-○(지번 주소: 인천 서구 ○○동 ○○○-○), 2층이며, 주된 업무는 조미김 제조 및 판매업, 김 도·소매업이다.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당사자들의 주장요지

가. 원고의 주장요지

1) 원고는 박○○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법원은

박○○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그런데, 박○○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고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. 9.경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회사이던 ○○식품과 상호, 인적, 물적구성 및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, 이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박○○에 대한 손해배상금 70,747,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또한 피고는 기존 개인사업체인 ○○식품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,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박○○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,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70,747,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1) 박○○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고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, 피고와 박○○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2) 박○○의 개인사업체가 존속하고 있어 피고를 설립한 것이 영업양도가 아니고, 박○○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공작물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무과실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할 뿐 영업상 활동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어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·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,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

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,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66892 판결,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),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,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,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94472 판결,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등 참조).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.

나. 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박○○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'○○식품'과 피고의 상호인 '주식회사 ○○식품'의 상호가 '회사'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, ② 위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본점소재지(인천 서구 ○○로 ○○번길 ○○-○, 지번 주소: 인천 서구 ○○동 ○○○-○)가 동일하고, 위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박○○로 동일한 사실, ③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주된 업무가 김 제조판매로 동일한 사실, ④ 박○○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 선고일(2014. 6. 3.) 이후인 2014. 9. 15.에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,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⑤ 박○○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, ⑥ 피고가 박○○의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그 개인사업체가 하던 업무와 동

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피고가 박○○에 대한 대가지급내역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, 박○○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그렇다면, 박○○는 자신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, 원고는 박○○ 개인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박○○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인 62,905,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6. 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, 7,842,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. 26.부터 2014. 12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배구민